



# 북한 3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 정세 전망

스콧 스나이더 /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

## 북한 3차 핵실험의 파급 영향

북한의 3차 핵실험은 지난 1·2차 핵실험보다 강한 주변국들의 반발을 가져왔다. 한반도의 현 상황은 2차 핵실험을 전후한 2009년의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 북한은 2009년 한국이 북한에 대한 해상 봉쇄 훈련 시스템으로 간주된 PSI에 동참하자 정전협정과 남북 합의 무효화를 천명하고, 2차 핵실험 강행한 바 있다. 다만, 2013년 현재 한반도의 위기 상황은 김정은 정권 유지와 강화를 위해 조성된 상황이라는 것이 김정일 정권하에 있었던 2009년과 다른 점이다. 그러나 주변국들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 2009년과 같은 방식으로 반응할지는 의문이다.

## 북한 : 긴장과 불확실성 고조

북한은 내부 안정성을 도모하고 외부, 특히 미국에 대한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해 도발을 일삼고 있다. 북한 핵은 내부 결속을 도모하는 동시에 김정은의 리더십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 미국 : 한국의 대북 정책 선도 희망

오바마 2기 행정부는 박근혜 정부가 대북정책을 주도하고 미국이 두 번째 역할을 맡는 방식을 선호한다. 박근혜 정부의 가장 큰 과업 중 하나는 미국의 움직임을 이끌어내는 일이 될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북한 문제에 관여할 수 있는 정치적 여지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은 한국에 확장된 역지를 제공하며, 북한 비핵화 없이는 대화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 한국 : 시험대에 오른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

한국은 더 이상 북한의 핵 위협은 통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 북한과의 대화와 억지를 조화롭게 병행해야 한다. 북한의 도발로 한국의 새로운 대통령은 원칙있는 대화를 추진할 것인지 남북 경색을 고착화하는 방식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시험대에 올랐다.

## 중국 : 대북 정책 변화 가능성

중국이 2009년 2차 북핵실험 당시에는 제재에 참여하는 듯 하다. 이내 북한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결정했지만 이번에도 같은 패턴을 유지할지는 의문이다. 2009년과는 달리 중국 고위층 정책결정자들 사이에서 중국의 대북 정책에 대한 비판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도 2009년 상황과 유사하나 중국의 참여도에 따라 결의안의 파급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미국·한국·일본의 북한 핵실험에 대한 강경 대응도 중국의 반응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시진핑 체제하에서 중국의 대북 정책 방향은 아직 결정되지 못한 것 같다. 근본적인 변화까지는 아니어도 전략·전술에서는 변화가 있을 것이다.

## 결론

미국은 한국이 주도권을 잡고 한반도 문제 해결을 선도해주길 원하고 있다. 한국 정부의 가장 큰 과제는 미국이 따라오도록 이끌어주는 것이다. 북한이 미국에 대해 직접적 위협을 가할 경우 오바마 행정부가 전면에서 나서야겠지만, 북한이 그 정도의 엄청난 위협을 감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도발은 중국이 기존 대북 정책을 그대로 유지할지 아니면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해야 할지를 고민하게 만들었다. 미국은 최종 정책 목표를 비핵화로 정하고 우선 추진 가능한 비확산 전략부터 실행해나간다는 방침으로 비핵화와 비확산에 대한 이분법적 논의는 지양하고 있다. 특히,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 문제를 미얀마 방식으로 진전시키는 방식의 필요성을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다. 미얀마 방식이란 미얀마와 같이 핵무기를 버리고 평화와 진전의 길을 따르면 도움을 주겠다는 내용이다. **統**